

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제 2 소 위 원 회

### 심의 ·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5-212-277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5. 6. 25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1,8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가.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

나. 피심인은 가.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.

#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교육자치법」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9234호, 이하 “보호법”)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경기도화성오산 교육지원청				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‘경기도교육청 메신저’ 이용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오침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(‘24. 9. 20.)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‘24. 10. 22. ~ ‘25. 3. 14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

##### 1) 유출 경위

‘24. 9. 19. 피심인 소속 직원이 급여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정수당 참고파일을 관내 공립학교 급여 담당자 238명에게 ‘경기도교육청 메신저’를 통해 전송하였다. 수신대상자 238명 중 151명은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였다.

##### 2) 유출 내용

오침부된 ‘조정수당 참고파일’에는 교육공무직 1,391명의 성명, 학교명, 조정 수당 내역,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었다.

### 3) 유출인지 및 대응

피심인은 '24. 9. 19. 09:54경 관내 공립학교 공무직 급여 담당자 238명에게 개인 정보가 포함된 '조정수당 참고파일'을 실수로 전송하였고, 약 8분 후 메신저를 수신한 담당자로부터 전송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달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다. 피심인은 유출 인지 즉시 발송한 메시지를 회수하였는데 수신 대상자 238명 중 확인하지 않은 87명의 메시지만 회수하였다. 피심인은 같은 날 11:02경 메시지를 확인한 학교(중복제거시 147개교)별 담당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였고, 13:38경에는 경기도교육청 정보기록원에 메신저 서버내 해당 파일 삭제를 요청하였다. 이후 피심인은 '24. 9. 20. 메시지를 확인한 학교담당자 151명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담당자들이 수신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. 같은 날 피심인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,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하였다.

### 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## 가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관내 공립학교 공무직 급여담당자 238명에게 '공무직 급여작업'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'조정수당 참고파일'을 오침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.

#### 나.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

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'조정수당 참고파일'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5. 4. 2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5. 4. 16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“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특히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“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3723호, 이하 ‘시행령’)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‘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(제3호)’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, 같은 영 제21조에서 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한편,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위원회 고시 제2023-6호, '23.9.22. 시행, 이하 ‘고시’) 제6조제3항은 “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주민등록번호 보관에 관하여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“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##### 가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]

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, ①해당 파일이 대국민 등 외부가 아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, ②명단 대상자 및 열람자도 학교 선생님 등 교육공무원으로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점, ③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④현재까지 본 건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, ⑤피심인이 신속하게 자료 회수 등 조치를 완료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

#### **나.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**

[보호법 제24조의2제2항]

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‘조정수당 참고파일’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 **IV. 처분 및 결정**

#### **1. 경고**

피심인이 경기도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관내 공립학교에 공무직 급여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‘조정수당 참고파일’을 오침부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**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.**

#### **2. 과태료 부과**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7호,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2호차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,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위 '23. 9. 15. 시행, 이하 ‘과태료 부과지침’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산정한다.

##### **가. 기준금액**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.

### <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 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차. 법 제24조의2제1항(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7호	600	1,200	2,400

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“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3]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“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2]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“[별표 2]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, 제2호 1) 및 2)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,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는 그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점,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 완료한 점,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70%인 420만 원을 감경한다.

**< 과태료의 감경기준 >**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위반 정도	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면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	기준금액의 30% 이내
조사협조	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기준금액의 20% 이내
자진시정 등	1.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기준금액의 20% 이내

**다. 최종 과태료**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< 과태료 산출내역 >**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위반	600만원	-	420만원 (기준금액의 70%)	<b>180만원</b>

**3. 개선권고**

재발방지를 위해 피심인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공문 등으로 발송할 경우 학교별로 구분하여 발송하는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한다.

**V. 결론**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, 제29조 및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

2025년 6월 25일

위 원 장     김 진 환  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김 일 환  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김 휘 강     (서 명)